

## 南北韓 經濟協力の 方向

주 성 환

---

---

본 논문은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의 원인을 사회주의권 붕괴에 의한 대외경제 단절과 북한경제의 한계적 구조에서 찾는다. 북한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모색으로서 Murrell의 현시적 비교우위모형에 근거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북한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

---

### I. 서 론

지난 1990년대 10년간 발생한 획기적인 세계 정치적 변화로는 독일의 통일,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권의 와해, 민주주의의 확산, 나토의 확장, 그리고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쇠퇴,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세기 말 세계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큰 변화로 인한 세계화의 확산과 정보기술산업의 급속한 발달 등을 들 수 있다.<sup>1)</sup> 실제로 이 변화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세계의 총체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표출된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인 세계화 현상은 실제로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143-701.

1) Binnendijk [16] pp. 11~13.

는 1960년대 말부터 이미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즉, 세계경제는 1960년대 말부터 세계경제의 호황국면을 이끌어 오던 미국경제의 하강과 함께 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1970년대 들어서는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등의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장기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경제회복과 경제적 이익추구를 최우선시하게 되었고, 내부적 대립과 갈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국은 덩소평의 등장과 함께 實事求是에 의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개혁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다. 또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의 체제적 모순으로 장기적 경제위기 속으로 침몰한 소련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1985년 혁신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에 앞선 경제적 실익우선의 국가목표추세는 사회주의권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동구 사회주의권의 대전환(big-bang transition)과 동서독 통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권 해체와 냉전의 종식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기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재화 및 금융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완전경쟁시장에 접근하게 되었다. 동시에 정보기술산업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와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재화 및 금융 시장에서 국가단위의 장벽이 빠르게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의 장벽을 초월한 세계화, 즉 세계시장의 완전경쟁시장으로서의 접근은 오랜 동안 자유시장경제를 운영하여 옴에 따라 완전경쟁에 익숙해진 시장경제국가들에게 전혀 없는 부를 가져다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완전경쟁에 취약한 경제체제를 지닌 국가들에게는 위기를 안겨주었다. 즉, 세계화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에게 경제적 위기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게는 국가몰락을 제공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기 위하여 세계화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경제위기와 체제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제위기로 인한 내생적 붕괴위험으로부터 붕괴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구자본주의국가들과의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체제의 개방은 서구자유주의사상의 유입을 불러일으키면서 구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같은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는 정책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체제개방으로 인한 체제붕괴의 가능성이 지난 수십 년

간 적대적 관계에 있어 온 한국과의 접촉·교류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 북한은 한국과의 접촉과 대화를 거절하는 한국배제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이러한 한국을 배제한 미국·일본 등 서구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접근 정책은 당연히 실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 동안 북한체제를 지탱하는데 유일한 지지기반이었던 군사력에 의존한 생존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즉, 북한은 핵, 미사일개발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통하여 생존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미국과의 벼랑끝 외교를 통해서 무기개발의 중지 대가로 경제적 원조를 받음으로써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체제를 보상받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생존확보를 위한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군사적 도발과 같은 '군사주의에 근거한 경제적 보상'의 이중전략에 대하여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보상을 통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개발 동결이라는 외교적 협상의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sup>2)</sup> 당연히 북한의 생존전략과 그에 대응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 그리고 한국의 과거정권의 대북한 고립정책 등은 서로 상충작용을 하면서 동북아지역의 불안정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등을 유발하여 왔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안정, 특히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긴장해소는 이 지역국가들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대립과 긴장해소, 안정과 평화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은 準戰時狀態인 한반도의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비군사적 외교수단들을 제시·실험하여 왔다. 지금까지 제시·실험되어 온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 대다수는 이론과 분단국들의 사례들을 근거로 남북한간의 경제적 접촉—경제교류의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다.<sup>3)</sup>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자.

2) 1994년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비핵화정책에 도전하면서 핵개발을 위협 카드로 사용하여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를 통해 경수로 2기 건설 및 중유 공급 등 그들의 실리를 취하였다. 그리고 1998년 말부터 1999년 3월까지 는 금창리 지하시설을 활용하면서 쌀 60만 톤이라는 실리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3) Rosecrance [22], Barbieri and Schneider [15], Hegre [18].

## II.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

### 1. 북한 경제위기의 원인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식량, 에너지, 원자재들의 공급부족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4%대,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는 2%대의 '正'의 성장률을 보여 오던 북한경제가 1990년 -3.7%, 1991년 -5.1%, 그리고 1992년 -7.7%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위기에 빠져들게 된 핵심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북한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중공업부문의 성장률을 보면 1990년도에는 전년대비 -0.4%로 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나, 1991년 -15.8%, 1992년 -21.0%로 감소하면서 북한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었다. 북한 중공업부문의 급격한 생산 위축은 북한의 무역총액이 1990년도에는 47.2억 달러에서 1991년에는 27.2억 달러로 급격히 위축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 해체를 시작으로 독일통일과 소련의 붕괴에 따라 이들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의 경제자원 단절과 대외교역의 위축은 북한경제의 주요 부문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식량의 경우를 보면, 사회주의권 국가로부터의 농업관련 기술과 물자공급 중단 등으로 인하여 1991년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자연재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북한의 대외교역 위축은 에너지부문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국내부존자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석탄 생산의 경우에도 석탄 생산에 필요한 핵심기계, 부품, 기술협력의 단절로 인하여 석탄생산량이 1989년 4,330만 M/T에서 1990년에는 3,315만 M/T로 격감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권 해체, 특히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의 원유 도입은 1989년 1,993.8만 배럴에서 1991년에는 1,385.4만 배럴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수입은 1987년까지 매년 80~100만 톤에 달하였으나 1990년에는 41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원조성격의 우소가격제도 폐지 및 경화결제를 결정한 1991년에는 4.2만 톤, 1992

〈표 1〉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

(단위 : %)

연 도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무역의존도	20.5	26.8	20.5	20.4	11.9	12.7	12.9	10.0	9.2	9.3	12.3	11.4	9.4																															

자료: 통계청,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1999, pp. 80~82.

한국은행, 『1999년 북한 GDP 추정결과』, 2000, p. 6.

년에는 3만 톤으로 격감하였다.<sup>4)</sup> 따라서 구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원유도입을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공급부족은 발전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연쇄적으로 중화학공업부문의 공장가동률, 그리고 북한의 산업생산 전체의 감소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볼 때,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에 따라 대외무역의존도를 최소화한 낮게 유지하여 왔으나 실제로 북한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적 기계, 원자재, 부품, 에너지, 자본 및 기술협력들은 외부에 의존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이 주장한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기 어렵고 또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요구되지 않은 수요품을 당장에 생산하기 위해 거액의 투자와 노력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품을 언제나 민주시장(사회주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장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것입니다.”<sup>5)</sup>라는 내용에서도 북한경제의 핵심은 외부에 의존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한등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중요도에서는 여타 소규모 경제들(small-scale economics)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한경제에서 필수적 원자재·부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기술협력과 기술지도 등의 대외관계를 연결하여 온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 힘써 온 1960년대에 20%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 초반에 서구자본주의권

4) 대한무역진흥공사 [4].

5) 김일성 [2].

으로부터 기술 및 자본 도입을 비롯한 대서방 개방정책의 실시로 1975년에는 무역의존도가 26.8%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후 대서방 개방정책의 실패로 북한이 폐쇄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다시 20%대로 복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대외무역은 사회주의권 해체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외무역의존도는 빠르게 하락하였는데, 무역의존도는 북한 GDP규모의 감소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1991년에 11.9%, 1995년에 9.2%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를 주도한 것은 구소련과의 교역감소 때문이다. 북한과 구소련 간의 교역규모는 1990년 27.5억 달러로 북한 교역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1990년에 4.6억 달러, 1993년 3.5억 달러, 1994년에 1.5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1997년에는 8,400만 달러수준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한국 및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짐에 따라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도 1993년 9억 달러, 1994년 6.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1991년과 1992년의 구소련 및 중국과의 급격한 교역감소는 구소련 및 중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른 경화결제 때문인데, 전통적으로 사회주의국가들간의 교역은 우호가격에 의한 청산결제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구소련과는 1991년 1월 무역이 바터방식에서 경화결제로 바뀌었고, 북한과 중국 간에는 1992년 2월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경화결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권 해체와 이들 국가의 경제이익우선정책에 따른 대외시장의 상실로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1990년에 들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 유지하여 온 대외무역의존도의 한계선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외시장과 협력관계 국가의 상실은 장기적 침체로 놓여 있던 북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면서 북한 경제를 결정적인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빠뜨리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는 한국전쟁 직후의 경제 상황과 비견된다. 당시 북한은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복구와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sup>6)</sup>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 당

6) 1954년부터 시작된 '경제부흥3개년 계획'은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전쟁 전인 1949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경제복구에는 사회주의권 국가의 경

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모든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 북한을 지원할 필요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북한을 지원할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지원능력도 있는 국가는 남한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 2.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경제위기 탈출을 지원하고, 체제 및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남한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원의 형태가 일방적 원조라고 하면 이는 북한의 경제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적 위기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경제발전노선에서 발생한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적 형태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이미 자생능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를 근본적 위기에서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위기 해결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이라는 형태를 갖는 남한의 대북한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첫째, 정치적 관점에서 부담이 적은 위기탈출방안이다. 즉, 북한은 당면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하여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자유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그러한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둘째,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자생능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동시에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접촉을 확대시킴으

---

제원조가 결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이 기간중 북한에 제공된 원조액은 5억 5,885만 달러로 국가재정수입총액의 40%에 달하는 규모였다.

로써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원조적 형태의 경제지원은 남한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북한을 경제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의 체제전환으로 유도하여 북한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한편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첫째,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남한의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남한에 대한 외국의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남한경제는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과 공동언어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이 용이하다. 남한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함으로써 남한의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을 결합시켜 생산의 효율성 증대, 시장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수입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입 비용감소, 군사비 감축에 따른 자원의 적정배분 등 남북한 모두 경제력이 증대되는 시너지(synergy)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남북한간에는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남북한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민족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한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치·경제적 효과를 주게 되는데,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을 경제위기에서 구해냄으로써 북한의 체제 및 정권을 안정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높은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접근방식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남한은 경제교류협력을 북한의 경제에 자생력을 갖게 하여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통일로 가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경제교류협력을 대남 전략의 한 수



단으로 간주하여 경제적 이득 추구를 통한 체제 및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남한은 '통일지향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추구하고, 북한은 '체제수호적인 경제교류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이 상이한 남북한의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한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sup>7)</sup> 이 경우 남북한은 협상을 통한 타협점으로서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남북한은 중국이 대 대만정책에서 보여 준 '拊異球同'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 Ⅲ. 남북한 경제협력의 방향

#### 1. 남북한의 경제발전 단계

오랜기간 동안 여러 국가의 경제발전 진행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 국가의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과 고용에서 농업부문의 비중감소와 더불어 제조업부문에 비중이 증가하며, 또한 제조업 내에서도 산업의 중심이 노동집약적 산업→자본집약적 산업→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현상,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실증적 현상에 근거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진행 정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북한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기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에서부터 중공업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북한의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성격이 경제발전의 진행결과가 아니라 경제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업화 발전전략의 결과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고착화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에서 나타난 바와 같

7) 양운철 [10].

이 공업화 전략에 따른 중공업 중심 경제구조의 장기적 지속은 경제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이 분명하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진행에서 보여주듯이 경제발전의 진행은 경제체제의 형태에 관계없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현상과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일체의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막연한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북한의 제조업 내부의 내용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 진행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중공업 분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국가들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Murrell [21]은 한 국가의 대외무역행위는 그 국가의 국내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내경제의 특성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회주의국가들의 대외무역행위를 분석하여 각국의 부존자원상태, 경제발전의 추진 정도, 또한 기타 국내경제의 특징들을 추정하였다. 이제 Murrell의 연구방법에 기초하여 남북한 국내경제의 특징과 경제발전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추정모형

Murrell에 의하면 한 국가의 대외무역행위는 그 국가의 국내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국내경제의 특성은 국제시장에서 그 국가의 경쟁력에서 나타나는데, 한 국가의 경쟁력은 세계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국제경쟁력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적인 평가와 사후적인 평가로 대별할 수 있다. 사전적 평가는 가격 또는 기술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으로 수출단가지수와 수출채산성 등의 지수가 대표적이다. 반면 사후적 평가는 무역이 실현된 이후 평가하는 것으로 비교우위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모든 국가는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특화하여 수출하고, 비교열위가 있는 상품은 수입한다는 것이다. 사후적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는 무역특화지수<sup>8)</sup>와 현시적 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지수이다.

한편 한 국가의 교역행위를 측정할 때 무역의 절대적 규모가 Balassa에 의해서 개발된 현시적 비교우위지수는 교역당사자국들의 경제적 조건—요소부존, 기술적 차이—에 따라 비교우위가 결정되고, 비교우위를 사후에 측정하는 것은 무역 후의 관측치가 비교우위의 양상에 많은 정보를 현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수의 추정은 국가의 무역행위를 무역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그 국가의 무역행위를 측정한다.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무역행위는 무역의 상대적 규모에 근거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무역규모의 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세계무역량을 이용한 수출 및 수입 RCA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x_{ij} = \frac{(\sum_{n \in N_i} X_{nj} / \sum_{n=1}^N X_{nj})}{(\sum_{n \in N_i} \sum_{t=1}^T X_{nt}) / (\sum_{n=1}^N \sum_{t=1}^T X_{nt})} \quad (1)$$

$$m_{ij} = \frac{(\sum_{n \in N_i} M_{nj} / \sum_{n=1}^N M_{nj})}{(\sum_{n \in N_i} \sum_{t=1}^T M_{nt}) / (\sum_{n=1}^N \sum_{t=1}^T M_{nt})} \quad (2)$$

여기서  $x_{ij}$ 와  $m_{ij}$ 는  $j$ 국가의  $i$ 재화에 대한 수출 RCA, 그리고 수입 RCA를 나타낸다. 또한  $X_{ij}$ 와  $M_{ij}$ 는  $j$ 국가의  $i$ 재화에 대한 총수출과 총수입을 나타내며,  $T$ 는 국가군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N$ 은 재화의 종류의 수를,  $N_i$ 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재화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 RCA지수는  $j$ 국가(여기서는 남한 또는 북한)  $i$ 산업에 대한 수출비중이 특정지역 또는 전세계에 대한 총수출에서 특정지역 또는 전세계에 대한  $i$ 산업 제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측정된 RCA지수의 값이 1보다 크면 그 산업은 비교우위를 가지며, 1보다 작으면 그 산업은 비교열위의 산

8) 무역특화지수는 총무역 ( $X_{ij} + M_{ij}$ )에 대한 순수출 ( $X_{ij} - M_{ij}$ )의 비율  $((X_{ij} - M_{ij}) / (X_{ij} + M_{ij}))$ 로서 표시된다. 이 값이 -1이면 완전수입특화, 0이면 비교우위 중립적인 상태, +1이면 완전수출특화를 나타낸다.

업이다. 이러한 RCA지수는 특정국가의 산업별 비교가 가능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RCA지수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은 비교우위의 존재, 크기를 나타낼 뿐 아니라 상관관계, 순위상관관계 등을 통해서 수출상품구성의 다양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 요소 집약도와 수출특화구조의 관계 등을 다양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한편  $j$ 국가가  $i$ 산업제품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갖고 있을 때,  $i$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상대적  $k$ 생산요소가 타생산요소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j$ 국가는  $k$ 생산요소가 타생산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Ethier [17]는 어떤 국가가  $k$ 생산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 재화를 수입한다면 그 국가는  $k$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k$ 생산요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i$ 재화를 수출한다면 그 국가는  $k$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평균적 경향'(tends to average)이 있다고 보았다. Ethier의 이러한 '평균적 경향'은 한 재화  $i$ 에서보다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재화군을 기준으로 할 때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Murrell은 개별 재화의 현시적 비교우위(RCA)지수에서부터 한 국가의 국내경제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확률이 크지만, 재화군에 기초한 현시적 비교우위(RCA)지수에서는 한 국가의 국내경제의 특성을 상당부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즉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재화군들의 분류에서, Hufbauer and Chilas [19]는 경제발전의 진행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재화군의 특화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국가의 발전단계 및 생산과 소비규모를 기준으로 국가군을 국가, 저개발국, 중간경제발전단계국, 선진산업국으로 분류하고, 교역되어지는 재화군도 자연자원 재화군(Ricardo goods), 표준기술 재화군(Heckscher-Ohlin goods), 기술집적 재화군(Products cycle goods)의 3개 재화군으로 분류하였다. 자연자원 재화군은 자연자원이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자연자원의 부존 정도에 따라 무역의 상품구조가 결정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표준기술 재화군은 표준화된 기술, 자본 및 노동이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지고 제조

〈표 2〉 재화군의 분류

재화군	재화군의 일반특성	재화군의 품목	SITC 코드
자연 자원 재화군	자연자원이 생산 에 중요한 재화	식품, 나무, 섬유, 광물, 제지, 비철금속, 원유, 광석, 광물, 연료	011-13, 022-25, 041-48, 051- 55, 061, 071-72, 074-75, 121, 242-43, 251, 261-63, 271, 274, 281, 283, 285, 321, 331, 341, 411, 421-22, 431, 667, 681-87, 689
표준 기술 재화군	표준기술과 규모 에 대한 보수불 변의 제조기법으 로 생산된 재화	음료, 담배, 시멘트, 석유제품, 바닥장식재, 유리, 도자기, 금 속 및 금속제품, 가사기구, 자 동차, 기관차, 선박, 가구, 의 복, 서적, 보석, 문방구	111-12, 122, 273, 533, 551, 553-54, 611-13, 621, 629, 651-57, 661-62, 664-66, 671- 79, 691-98, 724-25, 731-33, 812, 821, 831, 841-42, 851, 892-95, 897
기술 집적 재화군	기술지대를 갖는 고도의 기술상품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염료, 비료, 화약, 기계장치, 항공기, 기계류, 시계, 군수품	512-15, 521, 541, 581, 532, 561, 571, 711-12, 714-15, 717-18, 722-23, 726, 729, 734, 861-62, 864, 951

자료: Murrell,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1990에서 인용함.

된 재화들(orthodox textbook commodities)이며, 기술집적 재화군은 높은 기술적 지대(know-how rent)를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집약적 재화군이다. 그들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이 저개발 상태일 때 그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자연자원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지니며, 경제발전의 진행에 따라 표준기술 재화군, 그리고 기술 집적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무역구조는 자연자원 재화군, 표준기술 재화군, 기술집적 재화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구조로 이동한다.

## 2) 실증적 분석결과

북한은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들에 대해서도 경제통계자료를 발표하는데 엄격한 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경

계통계자료의 결핍은 북한경제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의 무역부문에 대한 통계적 정보는 다른 경제정보보다 더욱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역통계는 북한의 교역상대국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하는 재구성추적통계(mirror statistics)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sup>9)</sup> 재구성 추적통계 방법에 의한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다음과 같이 집계될 수 있다.

$$X_{iN} = \sum_{c=1}^C X_{iN}^c \quad (3)$$

$$M_{iN} = \sum_{c=1}^C M_{iN}^c \quad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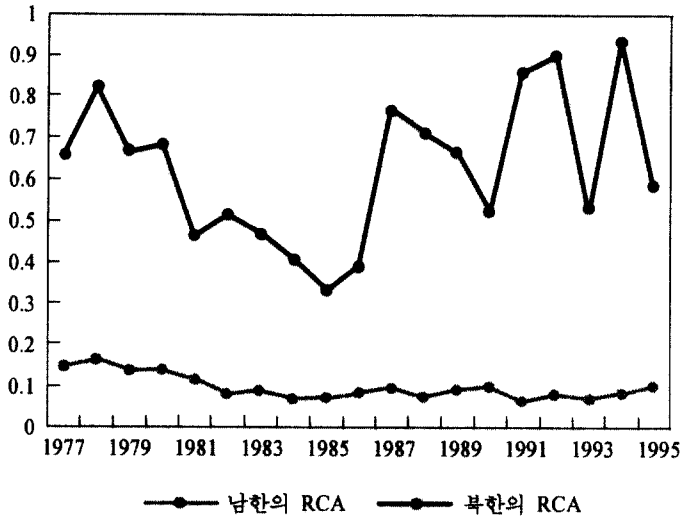
여기서  $X_{iN}$ 과  $M_{iN}$ 은 북한의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며,  $C$ 는 북한의 교역상대국의 수를 나타낸다. 또한  $X_{iN}$ 은 북한에서 재화  $i$ 를 수입한  $c$ 국가의 보고량을,  $M_{iN}$ 은 북한의  $i$ 재화를 수출한  $c$ 국가의 보고량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재화분류는 U.N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체계에 의한 세 단위(3-digit)를 기준으로 한다. 남한의 무역자료는 통계청의 SKTC(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다.<sup>10)</sup> 북한의 무역 데이터는 U.N의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Computer Tape에 수록된 자료이다. 또한 남한의 SKTC 데이터 베이스가 1977년부터 구축되었기 때문에 분석은 1977년부터 1995년까지 19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SITC 개정에 따라 Rev.2를 기준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9) 재구성추적통계에 의하면 북한 수출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국가의 수입액의 합계이며, 북한 수입은 북한에 수출한 국가의 수출액의 합계이다. 그러나 이 때 c.i.f 기준의 수입액이 운송료, 보험료 등의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수출액은 f.o.b 기준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북한의 대자본주의 진영에 대한 수입액과 수출액은 IMF방식을 적용하여 북한의 수출=상대국의 대북한 수입÷1.1, 북한의 수출=상대국의 대북한 수출×1.1로 계산한다.

10) 한국표준무역분류체계는 UN의 표준무역분류체계를 따랐다. 한국표준무역분류체계의 기본적인 분류기호 및 내용은 SITC의 기본항목과 일치하며, 5단위분류 이하에서 무역에 차지하는 상품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극소수는 상이하게 분류하였다. 따라서, 세 단위(3-digit)까지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구소련의 FIN자료 분류체계는 UN의 SITC분류체계와 다르므로 구소련의 자료를 UN의 SITC분류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중국의 「海關統計」는 1982년부터 UN의 SITC분류와 같은 분류체계를 사용하였으므로 1982년 자료부터 사용하였다.

〈그림 1〉 남북한의 자연자원 재화군 R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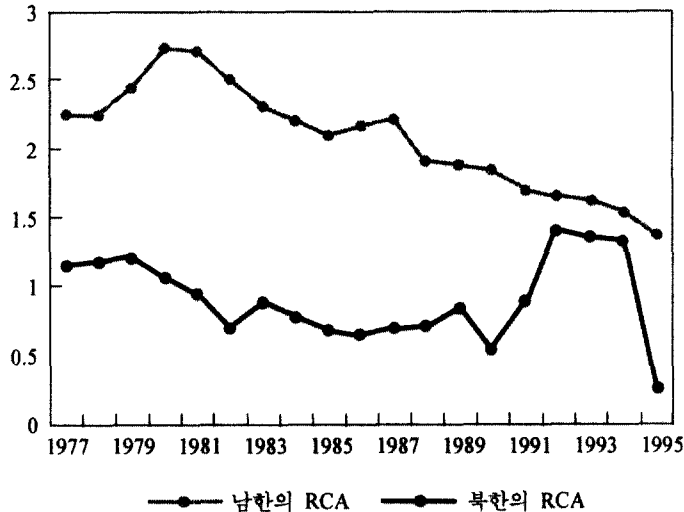


자료: 남한은 통계청의 데이터 베이스, 북한은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중국의 「海關統計」, 구소련의 「FIN」을 참조함.

남북한의 현시적 비교우위(RCA)지수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그림 1〉에서 〈그림 3〉까지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자연자원 재화군의 수출 RCA를 〈그림 1〉에서 살펴보면 분석 전 기간 동안 0.1수준을 유지하여 0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 남한의 수출 RCA의 값이 0.1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남한이 자연자원을 이용한 경제구조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며, 자연자원을 이용한 수출은 대외경쟁력이 없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남한의 경제개발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자연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연자원 재화군 의존형 무역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자연자원 재화군에 대한 RCA의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북한의 자연자원 재화군에 대한 수출RCA는 분석 전 기간에서 비교열위의 상태에 있다. RCA지수는 1980년대 초반에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1986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 초반에는 그 값이 1에 근접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전체에 걸쳐 1에 근접하는 등 RCA는 심한 변동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이 1990년대에 들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자연자원 재화군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2〉 남북한의 표준기술 재화군 RCA



자료: 남한은 통계청의 데이터 베이스, 북한은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중국의 「海關統計」, 구소련의 「FIN」을 참조함.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자연자원 재화군 수출 RCA가 1990년대 들어 상승하는 것은 북한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식량과 기초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가용 국내자연자원의 수출을 최대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경제가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상태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현대적 산업기술의 응용능력이 향상되면 그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표준화된 기술로 생산되는 재화군(Heckscher-Ohlin goods)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지니게 된다. 남한의 표준기술 재화군에 대한 수출 RCA는 〈그림 2〉와 같다. 남한의 표준기술 재화군에 대한 수출 RCA는 1980년을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 이상의 값을 1987년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재화군에 대한 수출 RCA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그 값이 '1'에 접근하고 있으면서 비교우위가 약화되고 있다. 남한의 표준기술 재화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남한의 공업화 전략의 추진결과이다. 남한은 경제발전 초기에 선진국의 자본재와 자본집약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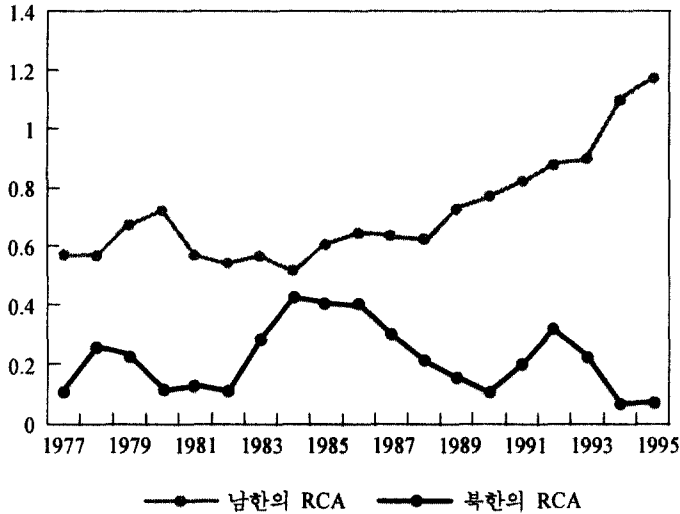
으로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제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 이러한 발전 전략의 결과 남한은 표준화된 생산기술을 축적하여 동재화군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부터 동재화군의 수출 RCA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자본재와 자본집적 중간재의 수입·조립제품 및 표준화 생산기술이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은 표준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Heckscher-Ohlin 재화군 형태의 무역구조는 1970년대 말에 성숙단계에 진입한 이후 쇠퇴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표준기술 재화군에 대한 수출 RCA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에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북한의 수출 RCA는 점진적으로 하락한 후 1992년 이후 일시적으로 비교우위를 회복하였으나 1995년부터 비교우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북한의 표준기술 재화군에 대한 수출 RCA가 1970년대기간중 1.2 정도의 값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북한이 기본적인 공산품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이 중공업 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술이 일정수준에 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사실은 “무역이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계량경제체제에서는 표준기술을 이용하는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는 Murrell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한 국가의 경제가 더욱 진보된 상태에 진입하면 그 국가는 신제품의 생산과 생산공정에서의 신기술 적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그 국가는 생산기술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군 — 즉, 기술집약적 재화군(product cycle goods) — 에 비교우위를 지니는 무역구조를 갖게 된다. 기술집약적 재화군은 제품을 개발한 또는 생산공정에서 신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생산하는 재화군이다. 남한의 기술집약적 재화군의 RCA는 <그림 3>과 같다. 기술집약적 재화군에 대한 남한의 수출 RCA는 1970년대부터 비교열위의 상태에 있으나, 1984년부터 점진적으로 꾸준

11) 북한은 군수산업과 관련이 깊은 금속, 기계, 석유화학 등 중공업부문의 우선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계공업은 금속공업과 함께 북한의 중공업 및 군수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공업으로서 병기 및 대형기계 생산부문에서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남북한의 기술집약적 재화군 RCA



자료: 남한은 통계청의 데이터 베이스, 북한은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중국의 「海關統計」, 구소련의 「FIN」을 참조함.

히 상승, 1994년부터는 비교우위를 확보하면서 그 지수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 남한의 생산구조는 국제분업구조에서 볼 때 선진적 산업구조가 아니라 외국의 기술과 기계설비에 의존하는 후진적 가공무역구조의 전형을 보여 왔다.<sup>12)</sup> 그러나 남한의 표준기술 재화군의 경쟁력은 하락추세에 있고 기술집약적 재화군의 경쟁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994년부터 비교우위에 진입하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1990년대 중반부터 남한의 경제발전단계는 先進產業國圈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기술집약적 재화군에 대한 수출 RCA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0.1~0.4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북한이 고도의 산업기술을 이용한 산업조직의 기반이 취약하고 선진산업기술을 활용할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북한은 선진기술을

12) 강철규 [1]는 1980년대 남한의 기술수준이 최종제품의 조립기술과 단순가공기술은 거의 선진국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면에서는 물론 정밀가공 제품설계 등의 산업기술은 선진국수준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도입하여 낙후된 경제를 재건하고 초보수준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sup>13)</sup> 물질적·제도적 정비를 하였으나<sup>14)</sup> 극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1990년대부터 수출RCA가 급격히 하락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러한 노력들을 포기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면 남북한 경제발전의 단계를 Hufvauer and Chilas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추정하여 볼 때, 남한은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초기 경제발전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1970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 표준기술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지니었다. 따라서 남한은 1970년부터 1980년대에는 선진국에 의해 표준화된 기술과 기계설비에 의존하는 중간경제발전단계의 전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남한은 표준기술 재화군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1994년부터 기술집약적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지니기 시작하여 자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선진경제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지속적인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실시하여 공업 부문에서의 자본-노동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높으며 표준화된 기술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생산방법을 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재화군 RCA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에는 이미 경제발전의 초기단계를 벗어나서 중간경제발전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 수출과 수입에서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경제구조로 후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급자족을 위한 자립경제정책을 일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외부세계, 특히 선진권과의 교류가 전무한 상태를 유지하여, 세계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신기술의 자체 개발 또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신기술 도입을 이루지 못한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경제발전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크게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13)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방권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도입, 1984년의 합영법 체계하의 개방, 1992년의 외국인 투자법과 합작법 체계하의 개방을 시도하였다.

14) 북한은 1988년 7개년계획과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3개년계획 착수', 1989년 과학기술법 제정, 1991년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15) 小牧輝夫는 1985년 북한의 1인당 GNP를 1,000달러 정도로 평가하면서 경제발전 단계가 '사회주의 중진국'의 초기단계로 진단하였다(최신림 [11]). 그리고 Lee [20]는 1990년을 기준으로 북한을 산업화된 사회주의 중간소득국가(highly industrialized socialist middle income country)로 진단하였다.

특히 북한경제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지속적인 후퇴를 거듭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의존성과 경제협력

일반적으로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한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은 생산측면에서 경제의 촉진으로 인한 동태적 효과가 나타나며 소비측면에서는 시장의 확대에 의한 수요증가효과가 나타난다. 이 때 경쟁추진으로 인한 동태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하여는 국가들간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중요시되며 산업구조의 유사성에 따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증대는 이들 국가간의 수평적 분업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국가간 경제협력을 통한 시장확대를 위하여는 국가간 관계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가 철폐되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선진공업국의 입장에서는 생산측면에서 생산가치의 이동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절감, 그리고 소비측면에서는 후발공업국의 저렴한 제품유입에 따른 소비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후발공업국의 입장에서는 생산·소비측면에서 선진기업 기술의 유입에 따른 원부자재, 고용의 확대, 소득증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간 경제협력은 국가들간의 산업구조 보완성이 중요시된다. 이 때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라 후발공업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지만, 산업구조의 보완성에 기초한 국가간 수직적 분업구조가 고착화되고 특히 분업구조의 비대칭적 고착화의 위험이 증가된다. 즉, 선발공업국과 후발공업국 간의 경제협력은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한 상호간 경제적 보완관계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제적 보완관계의 지속은 후발공업국의 선발공업국에 대한 경제의존관계의 심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종속화가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발전단계는 큰 격차를 갖고 있으므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선발공업국과 후발공업국 간 경제교류협력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의

선진기업 및 기술이 유입되며 이에 따라 원부자재의 유입 및 국내생산의 확대, 고용의 확대, 그리고 소득증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기술적 이익이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는 남북한간 분업구조의 고착화와 더불어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 및 종속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풍부한 자연자원 및 노동력을 이용한 남한기업의 제품생산비용절감 및 그로 인한 대외경쟁력 회복과 저렴한 북한산 제품의 남한 유입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되는데, 남북한 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클수록 남북한 산업구조의 보완성에 기초한 남북한 수직적 분업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커지게 된다. 또한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할수록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경제적 의존성에 따른 종속화의 위험보다 더 절실하며 더욱 커지게 된다. 한편 남한의 경우는 남북한 산업구조의 보완성에 기초한 남북한 수직적 분업이 남한 경제에 주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보다는 경제외적 효과와 그 효과에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현재와 같이 남북한 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큰 경우 남북한 수직적 분업의 고착·심화로 정도를 더 크게 하게 된다.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 가설'(peace through interdependence hypothesis)에 의하면<sup>16)</sup> 국가간 경제교류협력의 확대는 교류협력국간의 충돌 및 전쟁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 주제는 2개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두 국가간 경제교류협력은 두 국가간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둘째, 경제교류협력은 교류국가들간의 대화를 개선시키며 이는 상호간의 오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뿐만 아니라 충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기구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이미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증명된 이 가설에 의하면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북한경제의 남한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준전시상태에 있는 남북한 관계에 평화(peace)를 보장하게 된다는 경제외적 이익과 그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남한에게, 그리고 북한에게도 제공하게 된다.

16) Rosecrance [22], Barbieri and Schneider [15] pp. 387~404, Hegre [18] pp. 5~30.

#### IV. 요약 및 결론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요인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1990년 들어 직면하고 있는 식량난을 비롯한 심각한 물자부족으로 표출되는 경제위기이다. 북한은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기초로 생산수단의 사회화 및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와 비능률적인 발전노선의 운영에 따라 북한경제는 1970년대 정체기, 1980년대 침체기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위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는 식량, 에너지, 원자재, 그리고 생필품의 절대적 부족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면서 자체적인 위기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이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경제위기에 빠져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비롯한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대외경제관계 단절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목표로 대외무역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조달이 불가피한 원료 및 핵심 부품 등의 수입과 그러한 수입에 필요한 외화 및 구상 무역을 위한 수출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수입은 근본적으로 북한경제를 운영하는 핵심적 부분으로서 원료 및 원자재 공급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구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기술지원과 협조 또는 기술자 파견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맡아왔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 급작스러운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그 분야 기술협조의 단절, 그리고 원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의 중단을 초래하게 되었다. 식량과 기술지원의 중단은 자연재해와 겹쳐지면서 북한의 식량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에너지공급 부족은 북한의 에너지 다소비형 중공업부문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면서 원자재공급 부족을 유발하였다. 이어서 원자재공급 부족은 산업생산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이 대외경제관계의 단절, 그리고 근본적 요인이 북한의 경제체제와 발전노선에 있다고 하면, 북한경제의 붕괴방지는 당

연히 이들 요인의 해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정권유지를 기본틀로 하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상태에서 남한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여 주면서 남북한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의 자주역량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길일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진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Murrell의 '현시적 비교우위모형'에 근거하여 첫째, 남북한의 경제발전단계, 둘째, 남북한산업의 상호의존성과 경제교류협력 방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실증적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간의 경제발전수준을 분석한 바 남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표준기술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어 경제발전의 중간단계에 있었으나 1994년부터 기술집약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보이면서 경제발전의 선진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에 표준기술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경제발전의 중간단계에 있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천연자원 재화군에 비교우위를 나타내면서 경제발전의 후진단계로 퇴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발전수준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전형적인 형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교류협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증대라는 수요측면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북한의 저가생산품의 남한유입에 따른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부분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단순한 물자교역은 일정한 한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북한의 저가제품의 남한유입에 따른 남한의 일방적 적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북한 경제발전수준의 큰 격차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 분업을 통한 생산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남북한간에는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체제 형성이 양측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 남측의 '7·7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과 도발 등 경제외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여 오면서 2000년에 들어서는 '6·15 남북정상회담'등이 성사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경색된 대남정책으로 다시 최근에는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최근 수년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경제협력은 전혀 진전이 없고, 특히 최근에는 원조적 성격의 경제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결하여 북한의 생존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북한의 경제체제 및 발전노선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북한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을 통한 남북한의 균형적 발전과 통일을 지향한다는데 기본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경제교류에서 경제협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인내심 있는 남쪽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 참 고 문 헌 ▣

1. 강철규, "1990년대 한국산업구조 조정방향", 『경제연구총서92-85』, 대한상공회의소, 1992.
2. 김일성,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 보고",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제1집』, 국토통일원, 1988.
3.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1권, 로동당출판사, 평양, 1997.
4.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투자실무』, 서울, 1993.
5. 로동신문, 1997. 2. 7.
6. \_\_\_\_\_, 1998. 8. 22.
7. 백종천, "한반도 주변 4강과 북한: 동북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구도"; 백종천·진창수 편저, 『21세기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 세종연구소, 2000.
8. 서문길, "조선체제의 走向에 대한 거래", 『북한학회 1999년 하계학술회의』, 1999.



9. 송대성·이대우, 『평화체제구축 국제적 경험과 한반도』, 세종연구소, 2000.
10. 양운철, “남북한경제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남북한경제협력』, 세종연구소, pp. 32~33.
11. 최신림, 『북한의 주요산업분석』, 산업연구원, 1992.
12.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지표』, 서울, 1999.
13. \_\_\_\_\_, 『데이터 베이스』.
14. 『海關統計年鑑』, 각 연도.
15. Barbieri, K. and G. Schneider, “Globalization and Peace: Assessing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6, no. 4, 1999.
16. Binnendijk, H., “Back to Bipolarit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2, no. 4, Autumn 1999.
17. Ethier, W. J., “Higher Dimensional Issues in Trade Theory,” in R. W. Jones and P. B. Kenen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 North-Holland, 1984.
18. Hegre, H., “Development and the Liberal Peace: What Does It Take to be a Trading Stat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7, no. 1, 2000.
19. Hufbauer, G. C. and G. Chilas, “Specialization among Industrial Countries: Extent and Consequences,” in H. Giersch (e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Problems and Perspectives*, 1974.
20. Lee, P. 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Prospects for Reform in North Korea,” in I. J. Kim (ed.), *Korean Challenges and American Policy*, A Washington Institute Book, 1991.
21. Murrell, P., *The Nature of Socialist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22. Rosecrance, R.,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Commerce and Conquest in the Modern World*, Basic Books, 1986.
23.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Computer Tape*, Department of Statistics.